

G20 개발의제와 한국 ODA의 진로

이태주 한성대 교수, ODA WATCH 대표

목차

- I. G20 등장 배경과 의미
- II. 서울 G20와 개발의제 설정 배경
- III.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다년간 행동계획
- IV. G20 개발의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응
- V. G20 개발의제 항방과 한국 ODA의 진로

I. G20 등장 배경과 의미

G20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위기와 재편과정 및 역학구도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들이 세계경제협력과 금융을 지배하는 구도였으며 이러한 독점지배 구도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한계를 노정하였고 점차 신흥시장과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른바 세계 경제의 다극화에 의한 다극체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세계의 경제협력 체계는 IMF, OECD, World Bank, WTO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기구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G7, G8, G20, 파리클럽과 같은 비공식적 경제협력 포럼을 통해서도 주도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경제협력 기구들은 정당성과 합법성에서 많은 비판의 소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국들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G7이며¹⁾,

1)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G5가 최초로 모여 매년 회의를 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참가하는 G7으로 공식 대체되었으며 1988년에 러시아가 참여함으로써 G8이 되었다(Nelson 2010 참조).

1998년부터 러시아가 포함되어 G8이 되었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확산될 무렵에 세계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G8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BRICs와 신흥공업국들이 참여하는 G20의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9년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됨으로써 G20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²⁾. 이후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부터 G20 재무장관회의는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으며 피츠버그 회의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최고의 경제협력포럼(the premier forum for economic cooperation)’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G20 회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 캐나다(1999~2001), 인도(2002), 멕시코(2003), 독일(2004), 중국(2005), 호주(2006), 남아공(2007), 브라질(2008), 영국(2009), 한국(2010), 프랑스(2011), 멕시코(2012)와 같이 의장국이 바뀌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으며 워싱턴과 피츠버그, 토론토에서 추가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일단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와 불안정성에 적극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는 강력한 재정과 통화 확장정책과 보호주의 배제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 4월 런던회의에서는 IMF와 다자개발은행(MDBs)의 자본금을 1조 1천달러 증자하는데 합의하여 IMF 대출능력을 세배로 증대시켰고 5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투여해 경기부양을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창설하는데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창설과 IMF와 세계은행에서의 신흥시장국의 지분을 늘리는 것, 환경과 경제개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최고의 국제경제협력 포럼으로 G20을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6월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성장, 글로벌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상호 평가과정, 금융개혁, 국제금융 기구 개혁, 보호주의 배격과 무역 투자촉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으며 기본 원칙만 정하고 대부분 주요 결정을 서울회의로 미루었다.

그러므로 G20 서울 정상회의는 G8 비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의제와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회의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G20 준비위원회 및 각료들이 모두 야심차게 의제를 준비하고 있

2)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인 G22 임시 회의가 1998년에 두 차례 소집되었으며 이후 G33으로 대체되어 1999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것이 1999년 항구적인 경제협력 포럼으로서 G20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G22는 G8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싱가포르, 남아공, 한국, 태국이 참여하였으며, G33에는 G22 이외에 벨기에, 칠레,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모로코,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가 참여하였다.(Nelson 2010 참조)

으며 특히 기존의 G20의제를 원만히 합의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과 개발의제를 통한 개발격차 해소, 그리고 강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위한 민간의 무역, 투자 촉진과 비즈니스 서밋 개최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의제는 한국 정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장 주도적인 입장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비교우위 의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II. 서울 G20와 개발의제 설정 배경

한국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유치하자마자 개발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대통령부터 G20 준비위원장까지 한국의 개발 경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비교우위 분야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나 IMF 개혁과 같은 의제들에서는 한국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없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기도 하다. G20 의제에 개발이슈를 포함하는 것은 2010년 1월과 3월에 개최된 G20 셰르파(Sherpa) 회의에서 이미 논의 되었으며 개발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G20의 주요 임무인 국제경제협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의 대표적인 의제 중 하나로서 ‘개발(development)’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 첫째는 세계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인 G20에서 개발격차 심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G20 비회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인 개발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G20을 제도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회원국인 G172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개발이슈이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개발의제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G8 비회원국으로서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의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의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발의제를 주도함으로써 비회원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3) 2010.9.2.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명회 배포 자료 인용.

그 동안 한국 정부는 개발의제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개발의제를 구상하는 제안서(Development Issue Paper)를 작성하여 G20 세르파 및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제안서의 서문인 ‘왜 개발이 중요한가’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⁴⁾.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축과 불안정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으로 개발도상국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정으로는 최근 경제위기로 2009년 기준 추가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선(하루 1.25 미 달러 미만으로 생활) 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2010년 말까지 64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저소득 국가들의 빈곤 및 불평등 심화는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발이슈가 G20의 중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이 개발이슈를 다루도록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이것은 빈곤 및 개발격차의 완화가 전 지구적인 성장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더욱 폭넓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울 정상회의 의제에 개발 이슈를 포함함으로써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정상회의(the premier forum)로서 G20의 정당성을 재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G20는 개발 문제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1) 세계 경제에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리더십(inclusive leadership), 그리고 (2)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시대에 더욱 광범위한 경제적 리더십(broader economic leadership)을 제공하여 G20의 역량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개발의제를 설정한 것은 전 지구적 빈곤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와 개발도상국의 신성장 동력 활용 필요성, 그리고 위기관리 이후 G20의 제도화를 위해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III.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다년간 행동계획

한국 정부의 개발이슈 제안서에 의하면 G20 개발의제는 기존의 개발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의들과 중복을 피하고 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성을 견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4) G20 준비위원회, “Development Issue Paper”

“개발에 관련된 이슈들은 다양한 주제 및 접근법들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들 가운데는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자원 구축, 원조 효과성의 개선,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개발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의 측면을 고려할 때 G20은 개발의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현재의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중략)....경제성장은 지속적이고 저소득국 스스로 성취 가능한 빈곤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수조건이며, 개발격차를 줄이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저소득 국가들이 더욱 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이며....(중략)....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심각한 난제 중 하나는 세계 총수요의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 금융 위기로 심각한 금융 및 경제적 후퇴를 겪은 선진국들의 총수요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면 신흥개도국의 소비 증가 및 저소득국으로의 자본 흐름 증가는 추가로 세계 총수요를 창출하는데 주요 원천이 될 전망이다. 개발은 단순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오히려 개발은 건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협력체계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들은 복원력이 빠르고 동시에 균형 있는 세계 경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평등한 파트너로,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주체로 여겨져야 한다.”⁵⁾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개발의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만으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세계의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와 저소득국의 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역으로 저소득국은 균형 있는 세계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빈곤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많은 개발협력 논의가 원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빈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개발에 치중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무역과 시장확대, 민간투자와 성장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제안서에 담긴 8가지 핵심영역(pillars)을 보면 더욱 명료해 진다.

우리 정부의 개발의제 제안서는 저소득 국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경제성장의 핵심요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년간 행동계획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Development Issue Paper

1. 인프라(Infrastructure)

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어느 국가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우가 없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수준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최근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전기, 운송, 통신, 디지털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특히 심각한 인프라 병목현상 문제에 봉착해있다. 또한,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금 지원은 지난 20년간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달성하지 못했다. 더 많은 공공 장기자본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계획 및 지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남협력의 증가와 개도국 및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시설 구축에 민간분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및 자본 증액 계획과 인프라 시설투자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 (2) 민간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 자원 및 공적개발원조의 영향력, 그리고 민관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3) 국부펀드를 통한 인프라 시설투자를 촉진한다.
- (4) 내륙국 및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특정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5) 저소득국들이 인프라 시설에 관련한 지배구조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재정조달을 위한 세제 개편, 규제 및 지적재산권 개혁, 그리고 지역통합 인프라시설 필요성 등의 논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2.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국내 자원에서 비롯된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FDI) 역시 고용 창출의 주요 원천이며 이를 통해 빈곤이 완화될 수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성장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는 신흥개도국에서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국가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책 환경개선에 관련된 많은 이슈는 개발도상국들의 권한에 달렸다. 그러나 위험 인식, 시장 규모, 국외 투자자들과의 협상력, 금융 접근성 등의 추가적인 문제들에는 G20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적자원개발

인적 자본의 축적은 한 국가의 성장 및 개발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 새천년개발목표에 포함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이 목표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G20은 이러한 노력에 갈채를 보내며, 특히 양성평등 및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아동들을 위한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앞으로 저소득 국가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강화된 직업교육을 통한 실무 기술, 직업훈련, 그리고 고등교육 등이 이러한 목표에 포함된다. 또한 저소득 국가들이 고용주와 시장의 필요에 들어맞는 직무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에는 저소득국가 및 G20 국가에서의 고등교육기관들과 기업부문의 연계 강화, 직업교육 및 특화된 실무기술 훈련에 관한 경험 공유 등이 있다.

4. 무역

무역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어느 국가도 무역 없이 경제성장 또는 빈곤감소를 이루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무역은 저소득 국가들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 무역은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유입, 실행을 통한 학습, 그리고 경쟁의 도입 등으로 유발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더욱 기여한다. 우리는 무역을 할 역량과 세계무역에 대한 접근 모두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및 저소득국가 상품을 위한 ‘무관세, 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DFQF)’ 시장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무역을 위한 원조’는 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및 공급 측면에서의 경제 개혁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성은 수요 측면에서 저소득 국가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그 주변국 간의 물자 교류를 저해할 수 있는 국경을 넘은 지역적 인프라의 부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자간개발은행들이 지역경제블록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최빈국 중 일부는 지역경제블록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역내 무역 및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무관세, 무쿼터’ 정책 실행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G20이 ‘무관세, 무쿼터’ 정책에서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G20이 효과적인 국제경제 리더십 및 정당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5. 금융소외계층 포용 (financial inclusion)

20억이 넘는 성인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여부가 생존과 번영의 차이를 의미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들은 금융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 접근성 개선은 성장을 장려할 뿐 아니라 빈곤층에게도 우호적이며, 따라서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성장 회귀분석 결과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더 빠른 속도로 소득 불평등을 없애고 빈곤을 완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금융소외계층의 포용은 중요한 개발 이슈가 된다.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출범한 금융 소외계층 포용 전문가 그룹(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 FIEG)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SMEs)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킬 방안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서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이 분야의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FIEG가 혁신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한다. 본국으로의 국제송금 또한 중요한 재원임을 인식하고, 송금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 해소를 위한 방안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복원력을 갖춘 경제성장(Growth with Resilience)

우리는 G20이 성장을 촉진하는 국제공조 뿐 아니라 저소득 국가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당수의 저소득 국가들이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님이 증명된 바 있다. 오히려 빈국들은 불안정한 경제성장, 특히 앞선 시기의 경제성장을 상쇄시키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소득 국가들은 국제경제위기, 불안정한 물가, 기근 및 자연재해 등의 충격에 대응하고 그로부터 회복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금융위기와 식량 및 유가 파동은 저소득국가, 특히 이들 국가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G20은 저소득 국가들이 충격에서 벗어날 회복력을 향상시킬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7. 식량안보(Food Security)

G20 정상들은 장기적인 식량안보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라갈라 농업 및 식량안보 계획(the L'Aquila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Initiative)을 지지하고 세계은행에 세계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the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의 과제를 부여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계획들을 환영하고 더 나아가 G20이 농업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식량가격 불안이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경감시키는 등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현재의 사업들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저소득국가의 복원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G20은 세계식량 안보사업으로 유입되는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식량안보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기관들의 임무들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 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G20은 세계식량 안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거나 민간부문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8. 거버넌스(Governance)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정부의 개발정책이다. 외부 원조는 보조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따라서 좋은 정부구조, 투명성, 책무성, 그리고 효과적인 개발정책을 펼칠 역량은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개발의 핵심 요건들은 규제 개혁,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세제 개편 등을 수행할 국가의 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발효과성을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9. G20 개발경험공유 플랫폼(G20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

위에서 언급한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들과 더불어 'G20 개발경험공유 플랫폼(G20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을 만들어 효과적인 개발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발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국가 개발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개발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개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개발 모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과 G20 회원국 및 G20 비회원국 간에 개발경험을 공유하

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있었던 개발 플랫폼들을 통합하거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최대화시킴으로써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한 국가의 개발 관련 지식과 경험을 타국의 개발과 연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보다는 역동적인 “iPhone” 모델, 즉 지식 제공자가 노하우를 공급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식을 요구하는 국가들은 폭넓은 선택 메뉴에서 자국이 원하는 보다 자세한 정보나 전문지식을 정확히 지정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유지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소득 국가들과 적극 논의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이러한 8가지 핵심영역과 개발경험 공유 플랫폼 구축은 G20 회원국들이 제안하는 다년간 사업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각 회원국들이 3~4개씩의 모델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일차로 20여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세르파 회의를 통해 10개의 다년간 추진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다년간 행동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들을 선정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이며, 또한 선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구체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이다.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무그룹 논의 내용을 발표할 입장이 아니지만 다년간 추진과제의 선정 원칙은 기존 개발사업들과의 차별성, 경제성장과 복원력 증진사업, 민간참여와 민관 파트너십, 개발도상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IV. G20 개발의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응

G20을 바라보는 세계 시민사회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몇 가지 측면에서는 명확히 비판적이다. 우선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와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모두 G20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시민사회는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로서 정당한가, 합법적인가, 대표성이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과 책무성,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

특히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주요의제를 서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함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책임성을 키우는 측면도 많아졌다. 실제로 사공일 위원장은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 혹은 ‘서

6) 이에 관해서는 송진호, “G20 개발의제와 세계시민사회: Global Justice와 개발의제” ODA Watch 정책포럼 발표자료, 2010. 참조.

을 이니셔티브'로 불릴 주요 합의가 서울회의에서 3~5개 정도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서울회의에 대한 기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그 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시된 '코리아 이니셔티브' 혹은 '서울 컨센서스'의 내용은 개발도상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므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모델 선택권을 인정하고, G20 국가들이 다양한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한국이 다양한 개발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적극 기여한다는 것이다⁷⁾.

한편 사공일 위원장은 서울 정상회의가 기존의 G20과 달리 네 가지 실질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첫째는 금융안전망 구축, 둘째는 개발격차 해소, 셋째는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넷째는 조기경보체계와 글로벌 안정화 장치(Global Stability Mechanism) 마련이다⁸⁾. 특히 사공일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이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역량을 배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관 파트너십(PPP)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⁹⁾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20 준비위원회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는 무엇보다도 몇 가지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그 동안 사공일 위원장과 관련 전문가들의 언론 인터뷰 및 발표자료 등을 통해 소개된 G20 개발의제는 한국과 세계 언론 및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기존에 반세기 동안 유엔과 다자은행, OECD 등이 주도해왔던 개발의제와는 궤도가 많이 다른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요 비판과 의심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G20가 한국의 개발경험을 수출하려는 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한국과 해외에서 G20 서울회의에 관한 거의 모든 언론 보도가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개발의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모델화한다는 점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한국 경제성장 경험의 수출 시도에 대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관료들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 받고자 희망하고 있지만 일부 아프리카의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이미 상당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세계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은 60~70년대 한국경제의 독특한 대내외 환경과 수출지향형 경제성장 경험을 21세기의 WTO 체계에서 어떤 개발도상국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한국경제가 농민과 노동자 등 빈곤층의 희생과 농촌과 환경파괴, 인권침해와 개발독재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7)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 및 베이징 컨센서스와 대비하여 서울 컨센서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개발모델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 2010.7.30)

8) IL SaKong, “Looking Toward the 2010 Seoul G20 Summit” 2010 East-West Dialogue

9) “코리아 이니셔티브 진행 상황은” (연합뉴스 2010.8.1)

둘째는 G20 개발의제가 과거 60~70년대 개발연대의 성장중심, 수출과 무역중심의 성장 발전전략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빈곤층에게까지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서 확인되었으며 trickle-down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OECD와 국제개발기구들은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 정책이나 포용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 정책으로 성장중심 정책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기구들과 원조공여국 및 세계 시민사회는 공히 사회개발과 인간개발, 인권에 기반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안보에 중점을 두는 개발정책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는 G20 개발의제가 고삐 풀린 세계화를 적극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을 개발도상국에게까지 확산 시키려는 불온한 시도라는 것이다. 토론토 G20 회의 이후 세계 시민사회의 G20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거의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금융위기의 근원적 원인을 처방하지 못하는 G20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런데 서울회의에서의 개발의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대적인 민간투자와 시장 확대, 신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시민사회는 G20이 금융거래세(FTT)나 로빈후드 세(Robin Hood Tax) 도입,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상실하였으며, 재정 긴축정책은 오히려 빈곤층의 삶과 실업 증대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넷째는 기존의 개발의제와 다른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법도 없으며, 실질적인 개발재원 기여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년간 행동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비난의 근거가 미약하지만 G20 개발의제가 접근방법이 새롭지 않고 대안발전 담론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금융위기와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녹색발전 담론과 이를 실천하는 행동계획 마련이 중요하고 지역과 공동체, 인권, 민주적 옹호, 평등에 기반한 대안적 발전 담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곤과 불평등,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확대와 성장중심의 개발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곤층을 위한 성장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G20 국가들의 실질적인 개발재원 마련 노력과 기여가 없는 모든 개발 논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는 다년간 행동계획의 내용과 범위, 원칙과 접근방법, 재원마련 방식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V. G20 개발의제 방향과 한국 ODA의 진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발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evelopment)¹⁰⁾을 설치하고 이 실무그룹을 통해 개발의제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G20 개발의제는 11월 정상회의 이전까지 실무그룹을 통해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이미 7월에 있었던 개발 실무그룹 회의에 이어서 9월 말 UN MDG 고위급회의 이후 다시 만나 다년간 행동계획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회원국별로 3-4개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G20이 합의한 선정 원칙에 맞는 사업을 20여개 선정하고 10월에 있을 세르파 회의에서 최종 추진 사업을 10개 선정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물론 최종 사업선정은 경제성장과 회복력 증대, 민간참여와 동등한 파트너십, 기존 개발사업과의 차별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8개의 핵심 영역(pillars)에 맞게 선정될 것이다¹¹⁾.

G20 서울회의가 향후 글로벌 3중, 4중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특히 개발의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년간 행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G20 서울회의의 개발의제가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개발 레짐이 구축해 온 개발협력의 접근방식과 관점, 성과들을 경시해서는 곤란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의 개발연대가 결국 최빈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세계적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국제개발 레짐은 1980년대 이후 사회개발과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으로 급선회하였으며 모든 개발전략은 인권과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민주적 오너십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다. 다행스럽게 최근 국제개발의 혁신적 논의들은 ‘원조에서 포괄적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금번 G20 개발의제가 원조의 혁신과 개발효과성 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원조가 무역, 투자, 농업, 환경, 이주, 인권정책 등 포괄적인 개발정책과의 일관성을 견지할 때만 가능하다. 서울 개발의제가 원조를 넘어서 포괄적인 개발의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0) 개발 작업반의 공동의장은 한국과 남아공이 맡고 있으며, UN,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지역개발은행들이 기술지원그룹(Technical Support Group)으로 참여하고 있다.

11) 뿐만 아니라 G20 준비위원회에서는 개발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미 세계 시민사회와 세르파와의 회의인 Civil Dialogue 회의를 10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G20 개발 컨퍼런스를 10월 13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G20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계와 언론계 등과의 접촉도 활발히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레짐에서 중국을 대표로 하는 G-77뿐 아니라 남남협력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빈곤과 개발격차를 해소한다는 개발의제의 본래 목적을 생각할 때도 G20이 최빈국의 개발에 관한 희망과 전 지구촌의 공동 책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발의제의 내용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빈국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MDG를 달성하며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G20이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대표성이 없고 최빈국의 대표성도 없는 한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평등한 주권국가로서 개발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채무를 탕감하고 개발원조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G20 서울 정상회의가 유엔의 MDG 고위급회의의 결과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의제가 MDG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관점과 인권에 기초한 개발 접근법, 기후변화로 인한 최빈국의 적응과 피해 완화를 지원하는 전 지구적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최소 인권기준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개발 목표로서 MDG를 달성하는 것은 지구촌 모두의 책무이자 21세기 인류사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MDG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성장 정책이나 또 다른 개발의제는 무모하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장중심의 개발의제를 채택하여 이에 맞는 다년간 행동계획을 추진한다면 선정된 모든 개발 사업이 어떻게 MDG 달성에 기여하는가를 평가하고 입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과 재난 등 피해 완화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개발의제는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 정책과 전략,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전 세계적인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8가지의 경제성장의 핵심요인들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재정적 부담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저위험 고성과(low risk, high return)가 아니라 고위험 저성과(high risk, low return)의제인 이유는 기존의 논의에서 이탈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왜 최빈국에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어떻게 개발협력 자금을 동원하여 인프라 확충과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실질적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투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원칙적인 논의는 G20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난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한국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제2의 중동 특수와도 같은 아프리카 특수나 최빈국 특수가 당장 기대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도차이나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과도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도 아프리카 국가 간에 정치적, 민족적, 지역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이 자본과 기술, 인력과 기자재까지 모두 중국이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아프리카 시장과 경제를 왜곡하고 대외 종속을 심화시킬 우려가 더 크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G20 개발의제가 결과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같이 상업적 목적에 의한 인프라 개발지원 원조방식을 합리화하고 이를 추종하는 개발협력 전략으로 각인될 우려가 큰 것이다. 실제로 G20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안한 개발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약속을 강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 자원 마련이 없는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론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G20 서울회의가 개발의제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에 관한 진정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며 대안적인 개발담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전통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한계는 환경파괴, 불평등 심화, 성장주의와 소비만능주의 등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제 G20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인권, 평등, 문화다양성과 지역에 기반한 녹색담론을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과 자본중심의 개발이 인류와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인간과 지역,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대안개발 담론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G20는 최고의 국제 경제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정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대안적 개발담론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여국과 수원국의 구분이 불필요하며 선진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키고 무분별한 시장주의와 개발을 강요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G20를 위한 개발헌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G20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UN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¹²⁾.

12) te Velde, Dirk Willem et. al., 2009, A Development Charter for the G20,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참고 문헌

- G20 준비위원회, 2010. “Development Issue Paper”.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10. “G20 Process: Key Issues and Follow Up to the Pittsburgh Communique” Meeting of the Committee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 Delgado, Nelson G. and Soares A.C. 2005. “The G20: Its Origin, Evolution, Meaning and Prospects”, Global Issue Papers No. 25. Heinrich Boll Stiftung.
- Dervis, Kemal et al. 2010. “Institutional Development: How the G20 May Help the World's Poor”, www.brookings.edu
- IL SaKong, 2010, “Looking Toward the 2010 Seoul G20 Summit”, East-West Dialogue, East-West Center.
- ITUC, 2010, “ITUC/TUAC Evaluation of the G20 Toronto Summit Declaration and the G8 Muskoka Summit Declaration”, www.ituc-csi.org
- Kumar, Rajiv 2010. “A Development Agenda for the G20”, Policy Brief, jointly by the Club of Madrid, FRIDE, and KIEP.
- Molina, Nuria, 2010. “G20 Leaders Turn Their Backs on Development Commitments”, 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Eurodad), www.eurodad.org
- Naude, Wim, 2010. “After the G20 Summit: What Prospects for Global Development?”, UNU-Wider Angel Newsletter, www.wider.unu.edu
- Nelson, Rebecca M. 2010. “The G20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ckground and Implication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 OECD, 2010. “Global Governanc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ho's in Charge?” Development Brief.
- Okonjo-Iweala, Ngozi N. 2010, “Why the G20 should b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G160+”, Speech at the World Bank-Korea Conference on Post Crisis Growth and Development.

Sachs, Jeffrey, 2009. “The G20 Summit: Accomplishments beyond Expectation”,
www.voxeu.org

The G20 Toronto Summit Declaration, www.torontosummit.gov.ca

The G20 London Summit Communique and the Global Plan for Recovery and Reform,
www.londonsummit.gov.uk

te Velde, Dirk Willem et. al., 2009. A Development Charter for the G20,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